

같이 보기

: 이달의 산업보건인

인천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 꿈꾸며

인천시청 노동정책담당관실 황규상 주무관

글 안유진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Q | 노동정책담당관실의 업무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행정팀, 노사협력팀, 산업안전팀, 중대재해예방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대상별 사회적 노동프레임 분화에 따른 지역의 노동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과제추진,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노동현안에 대응하고 노동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노동단체 등과의 사회적 대화,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인천시의 고용노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 안전에 대한 제도와 체계구축이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산업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인천시청 노동정책담당관실

통한 다각적인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종합적인 노동안전 보건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하여 지역 산재예방 활동과 더불어 내부적인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Q | 노동정책담당관실의 당해 연도 중점사업(정책)은 무엇입니까?

_____ 5개년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인천시 노동안전 보건정책 기본계획 수립, 감정노동,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과업 추진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안전보건을 위한 노동권익센터 개소, 근로자 복합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센터 건립 등 중·장기 추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 당해 연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_____ 인천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증진을 위해 기초지자체(군·구) 참여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협의체 확대, 합동점검 등 관계 기관에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전개를 위한 시민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소규모 안전보건 취약 사업장 교육·컨설팅(안전진단 등) 추진 및 안전보건 홍보, 공공 수행·발주 공사 안전관리 점검이행 강화를 통해 지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중·장기 산업재해 예방 정책 도출 및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함께

같이 보기

: 이달의 산업보건인



66

지역 산업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시 역시
향후 지역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99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내부적으로는 인천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어 기존 총무과 중대재해 T/F팀이 5월 2일 노동정책담당관 내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이전되어 인천시 본청, 직속 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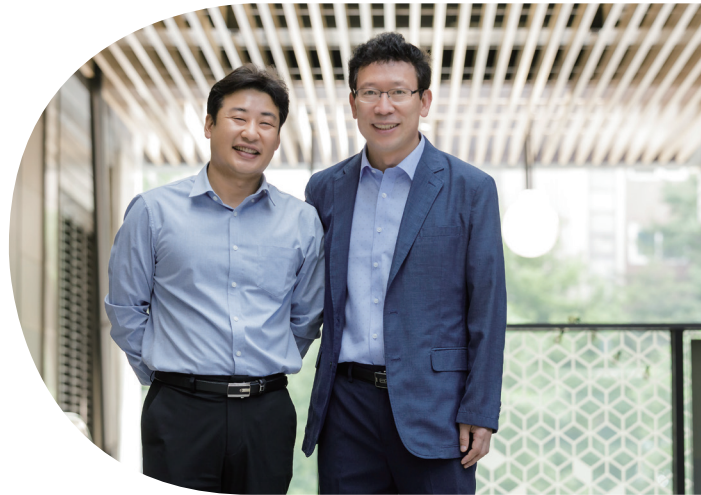
Q | 인천시에서는 관내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산재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와 계도 등 안전조치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시민안전감독관’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한 활동 근거(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서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서 안전감독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명예산업안전감독관→시민안전감독관 명칭 개정 예정).

Q | 그렇다면 ‘시민안전감독관’ 제도의 점검 대상 사업장은 어떤 곳들입니까?

‘시민안전감독관’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공공 발주공사 포함),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안전보건 취약 사업장 및 산재 다발 사업장, 그 외 유통·물류 사업장 등은 폭염 기간 중 중점 점검·지도 대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향후 재원을 확대하여 점검 대상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Q | 당해 연도 '시민안전감독관'의 활동 절차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_____ 올해 3월 2일 산업안전보건 단체 및 노동단체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제1기 시민안전감독관을 위촉하였으며, 상반기 현장점검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 19일 제1차 현장점검 활동을 수행하였고 6월 현장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하반기 현장점검 대상지 선정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매월 일정 기간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시민안전감독관 자체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미흡한 부분과 보완점 등을 파악하여 제도 정착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Q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_____ 인천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안전팀은 지난해 7월 신설되어 올해부터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아직은 초기 정착 중인 실정입니다. 지역 산업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시 역시 행·재정적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중대산업재해 대응능력 또한 권한 문제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잘 안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무엇보다 노동부 등 권한 있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가 필요한데 지자체와의 행정연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향후 지역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